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
제 안 설 명

- 일시 : 2012. 7. 12(목) 10:00
- 장소 : 본회의장

보고자 서 종 수 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종수 의원입니다.

본 성명서 건은 2012년 7월 4일 이필레 의원외 6명의 의원이 서면동의 발의한 안건으로 2012년 7월 4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성명서 건은 지난 제169회 임시회 (2012. 5.16 ~ 5.24) 기간중 5월 16일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

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으로 채택되었고, 이어 같은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통과 되어, 국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보낸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2012년 6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시·군 통합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명분하에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 지역으로 통폐합하고 특별시 자치구의의회와 광역시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 것은 그 동안 어렵게 자리를 잡아온 풀뿌리 민주주의를 전면 후퇴시킬 뿐 아니라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졸속안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된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국민의 뜻에

근거하지 않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개편안에 대해 우리 마포구의회는 40만 구민과 함께 강력히 항의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구현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안 철회 촉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성명서 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구의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지난 6월 13일 시·군 통합을 통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명분하에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 지역으로 통폐합하고 특별시 자치구의의회와 광역시 자치구·군의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제도가 1991년 부활된 이후 지난 21년 간 여러가지 시행착오와 노력 끝에 이제 지방자치가 안정화 단계를 이루려는 시점에 자치구·군의의회를 폐지한다는 행정체제

개편 추진안은 분권과 지방화가 필요한
현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이에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는 지역 주민
들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토론절차도 거치지
않고 단지 통폐합을 위하여 개편추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의결한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한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로서의 법인격을 없애고, 국가 및
시의 사무를 위임형태로 처리하게 하며
현행 자치구청장의 권한 약화 및 기존

자치구세를 시세로 전환하고 자치구의회를 폐지한다’는 내용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피하려는 졸속안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자주성,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자치법의 기본이념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발상으로 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자치구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지역 주민간 또는 주민과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과의 갈등을 조율하고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바, 중앙정치의 논리와 행정
편의주의적인 효율성만 강조하고
있는 개편안을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견제와 균형 등 민주적인 원리가
중요한 기본이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개편추진
위원회의 이번 개편안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의 균형발전과 선진 지방 자치 구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건전하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서울시마포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및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자치구·군의회 폐지를 철회하는 그 날까지 일치단결하여 이번 개편안을 추진하는 정부는 물론 이를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단체와 세력에게도 단호히 맞서 싸워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 한다!

2012. 7.1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일동